국통조 85-12-1896

2000年代 中共·台灣關係展望

國 土 統 一 院

Ⅰ.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研究結果 報告書임.

Ⅱ.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2000年代 中共·台灣關係展望

研究執筆責任: 韓 光 洙
産業研究院責任研究員(現)

刊 行 責 任: 金 明 相
調 査 研 究 室 補 佐 官

國 土 統 一 院
調 査 研 究 室

目　　次

머리말 ····· 3

1. 中共內部의 變化 ····· 5

가. 毛死後 政治體制의 再編成과 世界戰略의 變化 ····· 5

나. 對外開放과 經濟改革 ····· 15

다. 2000년대 中共의 經濟力 推定 ····· 20

2. 台灣內部의 變化 ····· 28

가. 台灣政治體制의 當面課題와 向後 展望 ····· 28

나. 台灣의 對外關係 ····· 33

다. 2000年代 台灣經濟展望 ····· 36

3. 中共·台灣關係의 變化展望 ····· 39

가. 中共의 홍콩문제 解決方式 ····· 39

나. 中共의 台灣統一政策과 向後 展望 ····· 52

다. 台灣·中共間 經濟交流現況과 2000년대 展望 ····· 59

머 리 말

中共이 台灣에 대하여 武力解決戰術을 버리고 平和統一攻勢로 전환한 것은 美國과 中共間 國交正常化가 발표된 1978年 12月 16日 이후부터였다. 이때부터 中共은 台灣에 대하여 統一問題를 둘러싼 다양하고 구체적인 交涉條件을 제시하면서 집요하게 統一攻勢를 취해 오고 있다.

그러나 台灣은 지금까지 中共의 이러한 提案에 대하여 일관된 자세로 거부하고 있다. 台灣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背景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또한 中共은 台灣에 대한 平和統一戰術을 언제까지 지속해 나갈 것인가.

中共과 台灣의 향후 관계전망은 台灣이 우리나라의 盟邦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中共이 한반도를 둘러싼 國際政治의 力學關係에서 장차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中共은 경제적으로 거대한 市場潛在力과 풍부한 資源을 보유한 저개발국으로서 장차 國際分業體制에 적극 참여할 전망이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힘겨운 경쟁상대로 부상할 전망이다.

本稿는 우리와 비슷한 경제개발경험을 갖고 있는 성공적인 신흥공업국 台灣과, 우리와는 상반된 정치경제체제이면서도 최근 각종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中共간의 統一問題 및 당면한 經濟交流問題를 분석, 전망함으로써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의 統一問題에 참고를 삼고자 하는데 있다.

1. 中共內部의 變化

가. 毛死後 政治體制의 再編成과 世界戰略의 變化

오늘날 中共政治體制가 實用主義 改革派를 중심으로 革命的 이데올로기보다는 經濟的 實利追求를 앞세우고 극적인 전환을 하게 된 배경에는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文化革命에 대한 反作用이라는 측면이 짙게 깔려 있다.

文化革命은 權力者에 대한 인민의 造反, 權力에의 직접참가에 의한 管理體制否定, 三大格差(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농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격차)의 消滅 등 급진적인 理念을 앞세우고 繼續革命論을 지주로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지속되었는데(절정기는 66～69년), 鄧小平을 중심으로 한 現實用主義 政權은 이러한 급진적인 정치이데올로기를 전면 부정하는 동시에, 經濟改革과 對外開放을 통하여 現代化된 社會主義强國을 목표로 體制改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中共政局이 毛澤東 이후의 權力構造 개편을 앞두고 본격적 조짐을 보인 時期는 1976년 4월 天安門事件으로부터 동년 9월 毛澤東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반년의 기간이었다.

天安門事件으로 인하여 鄧小平이 두번째 실각된 후, 中共 지도층의 세력구조를 보면 크게 4개의 파벌로 나누어져 있었다. 즉, 四人幇을 중심으로 하는 文革派, 文革에서 살아남은 老幹部, 周恩來 계열인 余秋里 등 經濟官僚, 그리고 毛澤東의 개인적 신임하에 黨第1副主席 겸

首相으로 급상승하고 있던 華國鋒 등이었다.

그러나, 老幹部들은 1967년 2월 文革의 시비를 둘러싸고 文革派와 대결에서 패한 후, 陳毅, 賀龍 兩副首相 등 유력자가 사망하고, 文革 이래 그들의 비호자였던 周恩來마저 死亡하자 政權의 주도권에서 멀어졌다. 革命 第2世代에 속한 經濟官僚層은 鄧小平의 再失脚에 의하여 經濟改革이 보류됨으로써 權力 장악이 어렵게 되었다. 신진 세력으로 등장한 華國鋒은 毛澤東의 후계자로서 毛를 이어 黨政의 頂上에 올라섰으나 그 권위나 세력이 보잘 것 없었고 협력자도 매우 적었다. 이에 대하여 文革 이래 주도권을 장악해 온 文革派는 당당한 위세를 보이면서 毛澤東의 측근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天安門事件에서 보인 바와 같이 그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 기반이 약해지고, 또한 周恩來의 사망후 毛澤東의 전폭적인 信賴를 얻지 못한 데다가, 華國鋒에게 후계자의 자리를 넘겨 주게 되자,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1976년 9월 毛澤東이 사망하고, 10월에 四人幇이 체포되는 政變이 발생하자 華國鋒, 葉劍英, 李先念 등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으며, 毛의 후계자인 華國鋒은 毛澤東을 능가하는 黨軍政 최고위직을 모조리 장악하게 되었다.[1)]

四人幇 제거 직후의 中共 지도층은 反四人幇勢力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華國鋒은 文革에 이르기까지의 毛澤東路線의 전면적 계승과 함께 革命的 高度成長政策을 다시 제기하였

---

1) 黨中央委員會主席, 黨中央軍事委員會主席, 行政府 首相

다.[2]

華體制의 政治路線의 本質은 "第1次 프로레타리아 文化大革命은 四人幇 분쇄를 계기로 승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고 한 1977年의 第11次 黨大會(11全大會)의 보고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四人幇을 배제하고 자신을 毛澤東의 위치에 내세우려는 毛體制의 繼承이라고 볼 수 있다.

華體制가 四人幇과 다른 점이 있다면 毛路線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現實的인 經濟建設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비록 실제 여건과는 동떨어진 과도하고 무리한 重工業優先政策을 취했으나,[3] 경제적 합리주의보다는 高度成長指標를 내걸고, 인민의 主觀的 能動性을 重視한 大躍進運動 이래의 毛澤東方式을 답습한 것이었다. 그 결과, 現代化計劃을 내걸고 야심적인 첫발을 내디딘 中共經濟는 커다란 混亂에 빠져 들게 되었고, 華國鋒이 추진하던 「10個年 國家建設計劃」은 사실상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1981年 黨에서 採擇한 「歷史決議」는 華國鋒의 여러가지 과오를 지적하면서도, 中共政權史上 가장 중대한 과도기의 역사적 역

---

2) 1977.2.「人民日報」,「紅旗」,「解放軍報」 등 3個紙 共同社說, "毛主席이 내린 決定을 모두 단호하게 지키고, 毛主席의 指示는 시종 변함없이 遵守한다." 이러한 毛路線 견지태도로 인하여 이들을 「凡是派」라 부름.

3) 1978년 2월, 第5期 全國人民代表大會 第1次會議에서 華國鋒은 向後 10年 이내에 大型鐵鋼基地 10개소, 大型油田, 가스田 10개소, 기타 鐵道, 港灣 建設 등 120개 大型 프로젝트 건설을 제안하였음.

할을 비교적 순조롭게 수행함으로써 毛澤東 사망을 전후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한 華國鋒의 공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華國鋒이 실각하고 鄧小平이 재등장한 경과와 그 意義는 무엇인가. 鄧小平은 文化革命 初期에 실각된 후 1973년에 復權되었으나 1976년 天安門事件으로 再失脚, 그 후 四人幇 축출후인 1977년에 재복권되는 부침을 되풀이한 끝에 현재는 中共指導部의 실질적인 제일인자로 군림하고 있다.

天安門事件을 계기로 四人幇에 의해 실각한 鄧小平은 毛澤東의 사망과 四人幇의 실각으로 再登場은 시간문제였다. 그러나 그의 재등장에 대해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77년 黨中央工作會議에서 華國鋒은 鄧小平에 대한 비판을 주장한 바 있다.[4)]

이에 대하여 鄧小平은 1977년 4월, 黨中央에 華의 주장을 반발하는 서한을 보내고 「毛思想을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이용하자」는 입장에서 凡是派의 관점을 비판하기에 이르렀으며, 黨中央은 이 서한을 승인함으로써, 鄧小平이 재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동시에, 이로써 毛澤東思想, 路線, 政策, 나아가서는 毛澤東 본인에 대한 評價를 둘러싸고 복잡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도화선이 마련되었다.

이 문제는 이 후 中共의 과도기를 일관하는 중대과제로서 수많은 곡절을 거쳐 1981년의 「歷史決議」에서 일단 公式見解가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아뭏든, 1977년 7월 16일 개막된 第10期 中央委員會 第3次總會에서 華國鋒의 黨主席, 黨中央軍事委員會主席 취임(76.10.7)의

---

4) 1976년 4월 中共黨中央委員會의 決議인 「鄧小平의 職務解任과 黨籍保留에 관한 決議」 참조.

追認과 아울러, 鄧小平의 全職務(黨副主席, 副首相, 軍總參謀長, 政治局常務委員 등)가 회복되었다.

이어서 동년 8월에는 毛死後 최초의 黨大會인 11全大會가 개최되었는데 四人幇失脚事件이 있은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文革期인 1973년에 선출된 第10期 中央委員의 약 5분의 2가 유임되었다. 同大會에서 華國鋒의 政治報告의 특징은 毛澤東路線을 거의 전면적으로 계승한 것이었으나, 毛澤東과 四人幇을 철저히 분리, 평가하였다. 同大會는 또한 新黨規約을 채택하였는데, 1973년에 결정한 10全大會規約을 대폭 수정, 1956년의 8全大會規約과 유사한 성격을 보여 주는 동시에, 黨의 임무로서 農業, 工業, 國防, 科學技術 등 이른바 四個現代化를 명시, 이후의 現代化路線의 전면적인 착수를 예고한 점에서 과도적 성격을 보여 주었다.

黨大會에 이어 개최된 中央委員會總會(一中全會)에서 華國鋒이 黨主席에 그리고 葉劍英, 鄧小平, 李先念, 汪東興이 副主席에 각각 선출되었다. 汪東興의 副主席 승격과 함께 吳德, 陳錫聯, 陳永貴 등이 政治局員에 재선되는 등 四人幇을 제외한 文革派 간부의 거의 대부분이 유임되었는데 이렇게 볼 때 11全大會는 鄧小平의 재복권을 감안하면 人事面에서도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同年 12월에는 胡耀邦이 黨中央組織部長으로 임명되어 후에 黨總書記로 등장하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文革을 부정하고 現代化計劃을 추진하려는 鄧小平 중심의 實用勢力이 文革路線을 견지하려는 華國鋒 세력과 대립하는 전환기적인 情局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1978年 2월 第5期 全人代 第1次會議에서 華國鋒은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國民經濟發展 10 個年計劃」을 제기하였으나, 1년도 채 못가서 사실상 폐기되고 3개년 調整政策(1979～81)으로 대체되었다. 同全人代는 또한 憲法을 개정하고 경제활동에 물질적 인센티브制 도입을 승인하여 기존의 中共社會主義體制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을 예고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新憲法에서 法制의 확립을 강조, 文革중에 폐지되었던 人民檢察院 및 陪審制의 부활을 확정, 現代化의 일환으로서 法治主義의 확립을 지향하였다.

이리하여, 毛治下의 政治體制에 대한 철저한 변혁의 요구가 점증하는 가운데 權力의 핵심부에서도 現代化實現을 위하여 社會主義原則과 毛思想의 한계 및 형식내에서 體制轉換을 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나갔다.

이런 가운데, 1978년 5월, 「眞理基準에 관한 討論」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5] 이 토론의 목적은 철학적 論爭이 아니라, 改革派가 추구하는 現代化推進을 위해 毛澤東思想의 교조적인 해석으로부터 탈피, 「凡是派」로부터 權力을 탈취하고 體制改革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었다. 이 討論을 통하여 毛思想에 대한 解釋權을 改革派가 장악, 毛思想으로써 改革派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1978年 12月 18日 北京에서 개최된 黨第 11 期 中央委員會 第 3 次總會는 '建國以來 中共黨 歷史上 가장 깊은 意義를 갖는 위대한 轉換點'이라고 일컫는 바와 같이, 과도기에 對한 中共이 전환의 방향

---

5) 1978.5.11.「光明日報가 "實踐은 眞理를 檢證하는 唯一한 基準"이라는 論文을 최초로 개재, 이후 「人民日報」 등 전국 各紙에 개재.

을 결정지은 회의였다. 同會議의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은 黨의 활동 중점을 1979年부터 '社會主義的 現代化 建設에 둔다'는 것이었다. 同會議는 또한 文革以來 폐지되었던 黨中央規律檢查委員會를 부활시키고, 文革의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免罪事件」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重工業에 편중된 「國民經濟發展 10 個年計劃」(1978. 11. 第5期 全人代 채택)을 시정, 농업생산 강화를 위한 2개의 文獻 즉 「農業發展을 촉진하는 약간의 문제에 대한 決定(草案)」과 「農村人民公社工作條例(試行草案)」를 토의, 집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같은 決定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第11期 3中全會는 毛澤東死亡 직후로부터 華國鋒體制로의 移行중에 鄧小平과 胡耀邦 등 實用主義 改革派가 주도권을 장악하였음을 보여주는 會議였다.

人事面에서도 陳雲, 胡耀邦의 승격, 그리고 軍總參謀長 黃克誠 등 9명의 老幹部가 中央委員會에 들어갔다. 또한 3中全會에 앞서 天安門事件 진압의 책임자였던 吳德이 北京市 革命委員會 主任에서 해임되고, 3中全會에 이어 열린 中央政治局會議에서는 汪東興이 黨中央弁公廳主任에서 해임되었으며, 胡耀邦이 신설된 黨中央秘書長에 임명되는 등 「凡是派」의 퇴진이 시작되었다.

3中全會에서 黨의 路線, 政策, 人事面에서 여러가지 중대한 決定이 내려졌는데, 그 후 사태전개로 미루어 볼 때, 이 會議에서 繼續革命論이 실질적으로 부정되었다는 사실이 文革과 近代化路線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즉, 3中全會는 계급투쟁을 요체로 하는 文革이래의 체제를 부정하고 毛澤東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규모의 大衆的인 階級鬪爭은 이미 기본적으로 끝났다는

毛澤東 자신의 글을 인용하여[6], 文革型 계급투쟁을 부정하였다.

鄧小平을 중심으로 한 改革派에게 가장 곤란한 과제는 毛澤東의 거대한 역사적 유산에 대한 평가와 장래에 대비한 위치정립의 문제였다. 다시 말하면, 우상화된 毛澤東의 허상을 전면 부정하면서도 그의 업적을 옹호함으로써, 毛의 유산 중에서 現代化政策에 긍정적인 부분을 추출해내는, 극히 위험하고도 미묘한 작업이었다. 이리하여 毛 유산에 관한 정리는 1981년 6월 第11期 6中全會에서 채택된 "建國以來 黨의 약간의 歷史的 問題에 대한 決議"(「歷史決議」라 약칭)에 집대성되었다.

「歷史決議」를 통하여 毛의 권위와 사상은 原則繼承 및 部分否定이라는 형태로 향후 추진될 現代化政策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성되었다. 中國共產黨이 「歷史決議」라고 부르는 종류의 「決議」를 채택한 것은 1945년 「약간의 歷史的 問題에 대한 決議」이래 두번째이다. 1945년의 「決議」가 中國共產黨 창당이래의 역사를 總括하고, 특히 30년대 전반이래의 노선혼란을 克服하여 抗日戰 이후를 전망한 것과 같이, 1981년의 「歷史決議」도 現代化路線의 확립을 위한 中共政府樹立 이후의 歷史問題, 특히 文革과 毛澤東에 대한 黨의 公式的 評價를 내려 現代化路線 추진의 포석으로 삼았다. 中國共產黨은 毛澤東에 대하여 文革以前과 以後로 나누어, 文革以後의 만년을 부정하는 한편, 만년의 오류에 대해서도 毛와 四人幇을 분리, 평가함으로써 그

---

6) 毛澤東, 「人民內部의 矛盾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問題에 대하여」 '毛澤東選集' 第5卷.

의 권위를 최대한으로 옹호하였다.

결국, 「歷史決議」에 의하여 文革을 둘러싸고 毛澤東과 黨의 無誤謬性 神話는 공식적으로 崩壞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中共政局은 質的인 轉換點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決議」를 채택한 6中全會는 胡耀邦의 黨主席 昇格, 華國鋒의 副主席 강등을 결의함으로써, 이 「決議」가 中共 轉換期의 頂點임을 뒷받침하였다.

이리하여 中共政治史上 초유의 강인한 정치적 생명력을 보여준 鄧小平은 1978년 12월 第11期 3中全會에서 黨路線의 轉換에 성공, 1981년 6월 「歷史決議」에서 文革과 毛澤東評價라는 난제를 해결하고, 胡耀邦, 趙紫陽과 함께 三頭體制를 형성, 실질적으로 黨·政·軍 3권을 장악하였다.

이어서, 1982년 9월 中共黨 第12全大會에서 鄧小平은 實用主義 政治路線을 기조로 한 黨官僚獨裁體制를 강화, 관료적이고 조직적 기능이 강조된 書記處 중심으로 政治體制를 전환하였다.

同年 11月 第5期 全人代 5次會議에서는 건국이래 네번째의 憲法改正을 단행하였는데, 개정헌법은 毛澤東政治의 象徵이었던 人民公社를 해체하고, 소련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社會帝國主義」와 같은 용어가 삭제되었다.

1984년 10월 第12期 3中全會에서는 그동안의 經濟改革과 대외개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價格·賃金體制 및 都市工業經濟部門의 改革과 幹部의 年少化·專門化를 겨냥한 新世代 人材기용을 核心으로 하는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決定」을 발표하였다. 效率的인 經濟建設과 鄧小平 후계체제의 확립을 위한 世代交替問題는 1979年부터 重點政策項目으

로 지목되어 왔으며, 1982년 9월 12全大會에서는 지식인, 專門家를 등용하는 人事措置를 本格化하였다. 1983年 10月에는 4,000만 共產黨員의 정비를 겨냥한 「整黨에 관한 決定」이 발표되고, 1984年 11月에는 黨中央整黨工作指導委에서 第2段階 整黨措置를 단행하였다.

이처럼 1982年 12全大會 이래 단행되어온 整黨 및 幹部層 개편 작업을 토대로 1985年 9月 개최된 中共黨臨時全黨大會에서는 葉劍英을 비롯한 改革비판세력 및 高齡者들을 대거 퇴진시키고, 「第3世代」로 일컫고 있는 40～50代의 젊은층인 胡啓立, 李鵬, 田紀雲, 王兆國, 邡建秀, 胡錦濤 등을 政治局 또는 書記處에 대거 등장시켰다. 이처럼 과감하고도 평화적인 세대교체의 성공으로 改革抵抗勢力의 반발을 무난히 극복한 鄧小平體制는 90年代 現代化計劃의 계속 추진을 위한 일단의 후계체제를 정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中國共產黨은 새로운 지도층 형성에 수반하는 內政의 변화에 따라 世界戰略 및 내외노선에도 커다란 수정을 가하였다. 사실상 1978년 12월 第11期 3中全會 이후 非毛澤東化政策의 진전에 따라 中共의 世界戰略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12全大會에서 美國을 비롯한 서방제국에 대한 유연한 자세와 對소련 관계개선의사표명으로 재확인되었다. '中蘇冷戰'은 後期 毛澤東治下 世界戰略의 象徵이었으나, 오늘날 中共 지도부의 대소인식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 論爭이라는 次元에서는 비편적이면서도 世界戰略面에서는 蘇聯과의 對決을 전혀 원치않고 있다. 最近 中共內에서 彭德懷, 高崗 등 친소파가 두드러지게 부활하고 있는 사실도 이러한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7]

70년대 이래 美國, 日本을 中心으로 한 西方諸國과의 접근에 重點을 두고 있는 中共의 世界戰略은 第3世界 및 社會主義諸國과의 關係에 커다란 變化를 가져 왔다. 근래 中共은 그들의 外交路線을 「獨立自主路線」이라고 부르는데, 실제적으로는 70年代의 「親美反蘇」戰略으로부터 「美蘇등거리」戰略으로의 轉換을 意味하고 있다. 이처럼 실리위주의 對外戰略은 85년 10월 黨總書記 胡耀邦이 밝힌 中共外交8原則에서[8]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平和共存 5原則 强調, ②獨立自主對外政策 遂行 ③패권주의 반대 ④社會主義國家, 開途國, 西方國家 等 모든 國家와 經濟交流 ⑤第3世界國家 지지 ⑥반패권 및 패권주의에 대한 투쟁 ⑦外交戰略上 「카드놀이」 排除 ⑧外國과의 友好關係 强化 等이다.

요컨대, 中共은 「미소등거리」 外交戰略아래 전방위 실리외교를 展開, 現代化計劃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나. 對外開放과 經濟改革

1970年代 後半 10億 人口에 1人當 國民所得이 200달러 水準에 불과한 저개발국이면서도 강력한 社會主義 이데올로기를 내걸고 政治强大國으로서, 第3世界를 자처해 온 中共이 現代化計劃을 표방하고 적

---

7) 中嶋嶺雄, "東アジア新しり國際環境" 「國際政治」 78. (日本國際政治學會編, 84.10), pp.4～5 참조.
8) 「人民日報」 1985.10.11.

극적인 富國策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1979년 「3個年調整計劃」이 실시되면서 부터이다.

본래, 現代化計劃은 1975년 周恩來에 의해 주창된 것이다. 당시 월남전 종식을 계기로 美國이 對中共 봉쇄정책을 폐기하고 화해정책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서방제국은 중공시장진출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다. 對內的으로는 文革의 회오리가 잠잠해지면서, 林彪 등 극좌세력이 밀려나고 改革派가 세력기반을 굳혀나가는 시기였다. 이들 改革勢力은 美蘇 양대국의 봉쇄정책내지 견제정책으로부터 벗어나, 中共政府樹立後 처음 맞는 국제적인 好條件 속에서 당의 활동을 경제건설에 집중시키기로 하고 經濟體制改革과 對外開放政策을 양축으로 하는 現代化計劃의 기본강령을 1978년말 第11期 3中全會에서 확정시켰다.

이 후 경제 각부문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험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대담하게 經濟活性化政策을 추진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生產力增强을 강조하여, 물질적 인센티브制度의 과감한 도입과 함께 產業間 不均衡을 시정하고,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產業政策의 우선순위를 종래의 중공업, 경공업, 농업으로부터 농업, 경공업, 중공업 순으로 전환시켰다.

農業政策에 있어서는 農村經濟의 專門化, 商品化, 現代化를 내걸고 旣存의 自給的 生產方式을 개별 생산청부제에 의한 商品生產 위주의 방식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分配面에 대해서도 종래의 절대적 평등 지향 정책을 철저한 상대적 평등 정책으로 수정하였다. 아울러 농업세를 감면하고, 농산물의 정부 수매가를 최고 25%까지 인상하여 공산품에 대한 농민들의 유효수요 증대를 꾀하였다. 이리 하여 1979~

84년간 농업생산은 1981년의 4.5%를 제외하면 7~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다.

공업부문에 있어서도 企業自主權을 大幅 擴大하여 中央政府의 指令性 生産計劃 할당제를 지양하는 동시에 生産目標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自由販賣를 許容하였다. 또한 利潤上納制를 폐지하고, 納稅制를 도입함으로써, 利潤에 대한 企業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경영이 부실한 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을 과감하게 중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폐쇄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中共의 企業들은 과도한 국가통제가 줄어드는 가운데, 상품생산, 가치법칙, 시장메커니즘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企業人의 專門性과 노동자들의 적극성, 主動性, 창의성을 북돋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工業生産은 국민의 所得水準 向上과 더불어 輕工業部門의 성장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경공업부문에 대한 施設投資의 擴大에 힘입어 重工業도 輕工業과 비슷한 成長率을 보이고 있다. 1979~84년간 工業部門의 成長은 1981年의 4.1%를 除外하고는 7.7~11%의 순조로운 성장을 지속해왔다.

中共當局은 이처럼 産業部門間 조정 및 활성화 정책과 아울러 對外政策面에서도 획기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核心은 美·蘇 등거리 外交를 주축으로 하는 '全方位 實利外交'로 요약할 수 있다.

美國과는 台灣問題로 줄곧 팽팽한 對立을 계속하면서도 양국간 무역규모는 1979년의 10億 달러에서 1984년에는 60億 달러로 급신장하였다. 소련과도 국경분쟁, 아프카니스탄사태 및 월남문제 등이 뒤

얽혀 있으면서도, 이들 정치·군사적인 현안문제를 유보한 채 최근 국경무역 등 경제교류가 급격히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9] 1986～90년간 200億 달러 규모의 長期貿易協定締結을 합의해 놓고 있다.

이러한 政治分離方式의 實利外交는 國境紛爭이 고질화된 印度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未修交國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날 中共의 對外經濟政策에서 가장 重視되는 국가는 '現代化政策 추진에 있어서 최대협력국'인 日本이다.

日本은 1949년 이래 中共과 사실상 중단없이 교역을 지속해왔고, 현재도 대외무역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中共의 對外貿易中 第1位 相對國이다. 양국은 商品交易 이외에도 長期經濟開發事業에 대한 엔차관 제공, 石炭 및 石油開發을 위한 輸出入銀行 融資, 그리고 각종 公私債發行 등 資金協力, 大型基本建設 프로젝트에 대한 合資投資와 旣存企業의 改造協力 등 經濟 각분야에서 거의 전면적으로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가히 日本은 中共市場 진출에서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형편이다. 1984년의 양국간 貿易額은 130億 달러였으며, 1984년에서 1990년까지 4,700億 엔 규모의 第2次 엔차관계획, 그리고 總 30億 달러에 달하는 輸出入銀行融資 2次分이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볼 때 日本과 中共關係는 經濟交流를 바탕으로 사상 최고의 우호분위기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10]

---

9) 1984년 양국간 교역액은 11.6억 달러

10) 韓光洙, 「中共·日本間 經濟交流의 展開過程과 現況」(1984.10, KIET) 參照.

그러면, 거대한 시장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中共이 오늘날 추진하고 있는 經濟改革政策의 特性은 무엇인가?

첫째, 中共의 經濟體制는 정통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中國에서 자생한 毛思想을 접합함으로써, 소련이나 동구와는 다른, 아시아내지 中國文化構造에 부합하는 中共特有의 사회주의 모델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現在 GNP 規模는 日本의 3분의 1가량인 3천 800억 달러수준에 불과하지만 세계정치무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政治强大國으로 달갑지 않은 외세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시켜 스스로의 실익에 맞아 떨어지는 政策을 獨自的으로 樹立함으로써, 對外依存的이 아닌 自國中心의 經濟開發政策을 推進하고 있다는 점이다. 現在 中共은 對西方經濟交流의 經驗이 적은 탓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난관을 克服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거의가 强力한 政治力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째로, 中共은 어떤 共產國家보다도 資本主義 메카니즘을 導入하는데 대담하고 적극적이다. 예컨대, 전해안에 걸쳐 經濟特別區域 또는 經濟技術開發區域 등 對外經濟交流를 위한 개방도시를 設置하여 所得稅의 감면과 100% 外資投資의 許容, 自由市場制度의 확대권장, 計劃生產의 대폭 축소, 그리고 證券市場 개설조짐 등이 전형적인 예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改革 推進過程에서 發生하는 問題點도 적지 않다. 일부 군부 및 문혁잔재세력 등 좌파의 견제, 관료 부르죠아 집

단의 출현과 그에 따른 부정부패의 만연, 過剩投資로 인한 경기과열과 인플레, 市場메카니즘의 導入限界, 社會間接資本의 미비 및 에너지 공급부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中共當局은 이러한 問題點에 積極的으로 對處하여 좌파의 반발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實用主義에 입각한 經濟改革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 2000년대 中共의 經濟力 推定

1) 經濟開發의 現段階

中共의 實質GDP成長率(世界銀行 推計)은 1960年代에 5.2%, 70年代에 5.6%로서 비교적 높은 水準을 지속해왔다.[11] 그러나, 그 過程은 1966年부터 70年代 中盤에 이르는 文革의 大混亂으로 經濟成長이 크게 정체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政治風向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期間中 높은 成長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投資率이 높았던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中共의 投資率은 60年代 중반에 22%로부터 70年代 후반에는 33%로 上昇하였는데, 이는 中共의 成長 패턴도 인근 아시아 開途國들과 마찬가지로 投資主導型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中共의 성장패턴이 여타 아시아 開途國들과 크게 다른 점은 自給自足을 전제로 한 「自力更生」政策을 배경으로 資本財生産을 강화하는 동시에 對外貿易에 대한 依存度를 최대한 억제해왔다는 데에 있다. 즉, 投資資金의 源泉을 外國에서 구하지 않고, 國民의 소비수준을 최대한 抑制,

---

11) 世銀이 發表한 低所得國平均, 60年代 4.4%, 70年代 4.6%.

國內資本蓄積을 높임으로써 重工業에 대한 投資配分을 우선시켜왔다는 것이다.

中共이 이러한 政策을 수행하는 동안, 產業部門間 不均衡의 擴大 및 技術進步의 정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70年代에 이르러서는 投資效率의 악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1979年부터 「3個年 經濟調整計劃」이 實施되어, 實用派 주도아래 對外經濟開放과 國內經濟體制改革의 서막이 올랐다. 「調整」이란 경제 각부문간의 不均衡 是正, 그리고 「改革」은 현행 經營管理體制의 改革에 의한 生產效率의 向上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 결과 1979년이래 中共經濟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며[12], 1981～85年을 計劃期間으로 하는 第6次5個年計劃의 1985年 目標는 이미 大部分 1983年에 達成되었다.

2) 2000年代 中共經濟展望

中共黨總書記 胡耀邦은 1982년 9월 第12全大會 基調報告에서, 中共의 農工業 總生產額을 1980年 實績基準으로 2000年까지 4배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目標를 밝혔다.

「1981年부터 今世紀末에 이르는 20年間, 우리나라의 經濟建設의 全般的인 目標는 經濟效率을 부단히 제고한다는 전제아래, 全國의 農工業總生產額을 4倍로 증가시키는 것, 즉 1980年의 7,100억元으로부터 2000年에는 2兆8,000억元 水準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目標를 달성하면, 우리나라의 國民所得總額과 주요 農工業生產物의 생산

---

12) 農工業總生產額은 1981～84년에 實質年平均成長率 9.4%를 기록

산량은 世界上位에 올라서고, 國民經濟 전체의 近代化는 커다란 진전을 보게되며, 도시 및 農村의 人民所得은 몇배로 증가하여 人民의 物質, 文化面의 생활은 「小康水平」에 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農工業總生產額(工農業總產值)이란 社會總生產額을 구성하는 工業, 農業, 建設業, 交通·輸送, 商業 등 5개 物質生產部門으로부터 建築, 交通·輸送, 商業의 3개 부문을 제외한 것으로 대체로 社會總生產額의 8할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4倍增加目標에 따른 구상을 보면, 1990年까지의 10년간을 經濟調整政策의 철저화에 의한 基礎强化期間, 1990年 以後의 후반 10年間을 새로운 經濟振興期間으로 잡고, 80年代 初盤의 成長率은 4～6%線으로 억제한 후, 90年代에는 7～8%에 이르는 成長加速期에 돌입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農業은 2000年까지 年平均 成長率을 5.6%로 하고, 工業部門은 80年代 6.7%, 90年代 8.9%로, 90年代에 가속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80年代 前半을 살펴보면, 經濟調整政策이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어 中共經濟는 上記 計劃을 상회하는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註8) 참조). 그러나 이것은 自律化에 의해 달성한 短期的인 成長加速이라는 측면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農業部門은 戶別生產都給制導入의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그리고 工業部門은 에너지, 輸送能力의 제약에 따라 현재와 같은 성장속도는 상대적으로 減速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市場經濟化를 배경으로 한 인플레의 가속, 輸入超過에 의한 外貨準備의 급속한 減少, 財政赤字의 확대, 經

〈表 - 1〉　　中共의　2000年　長期計劃의　개요

	經濟政策의 方向 ＼ 個別目標値	工農業生産	農業生産	工業生産	輕工業生産	重工業生産	에너지生産	對外貿易額
1981年	第6次計劃 ・調整・改革・정돈・向上의 八字 方針을 실시 ・既存企業의 정돈, 再編成과 技術改造 ・초보적인 經濟改革	4%~5%						
1985年	第7次計劃 ・企業에 대한 광범위한 技術改造 ・經濟改革을 단계적으로 실시 ・企業組織과 각 방면의 經濟構造 合理化를 달성	7.2%	5.6%	6.7%	8%→7.5%	8%	3.55%	7.2%
1990年	第8次計劃 새로운 經濟振興期, 國民經濟는 지속적으로 둔한 템포로 발전.	8%~9%		8.9%	7.5%			
1995年	第9次計劃							
2000年		4倍增	3倍增	4.5倍增	4.2倍增	4.7倍增	2倍增	4倍增

資料：日中經濟協會，「中國의　經濟計劃에　關한　緊急調査報告書」

濟不正의 만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緊縮財政의 强化를 초래하고 있다. 더우기, 調整政策에서는 消費 및 國民生活水準의 향상을 우선하기 때문에 消費가 확대되고 國內貯蓄이 감소하는 사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으로부터의 資本流入을 억제하게 되면, 國內投資가 불충분하게 되고 高成長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조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4倍增加目標構想에 나타난 年率 7% 정도의 높은 成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經濟管理體制 自由化에 의해 向上되고 있는 經濟效率을 중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층 더 對外開放政策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國際分業體制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技術進步의 促進을 위해 技術導入에 주력하며, 경제전반의 효율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高度成長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國內貯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外國資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물론 이러한 開放化政策 및 이를 바탕으로 한 經濟效率 向上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요소도 存在한다. 政治狀況이 과거 中共經濟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의 政策이 經濟的 活況을 가져와 人民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 政策方針에 대폭적인 변경이 없다면 內外均衡의 조정에 따르는 다소의 진폭은 예상될 수 있지만 2000년의 4倍增加目標는 달성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生產의 4倍增加計劃과 함께 貿易規模의 4倍增加目標도 세워져 있

는데, 이에 대하여는 2000년까지의 貿易依存度를 일정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거론한 經濟政策을 추진해 나가려면 貿易依存度가 당연히 높아질 것이므로 貿易의 4倍增加目標도 초과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中共의 輸出중 4분의 1, 外貨收入중 3분의 1이 홍콩을 경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997年에 主權을 회복한 후에도 홍콩의 현상을 유지시켜 貿易 및 金融센터로서의 역할을 활용한다면 목표달성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향후 홍콩은 中共에 있어서 貿易 및 金融면에 머무르지 않고 先進技術과 經濟管理技術의 창구로서도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홍콩을 통하여 市場經濟의 활력을 흡수, 활용함으로써 中共의 近代化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第3章 참조)

中共은 금후 人口增加率이 1%정도에 머물러 開途國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4倍增加目標가 실현되면 일인당 GNP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伸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中共의 2000년 일인당 GNP는 1,000달러 水準으로 여전히 아시아 開途國에 비해 저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다음은 産業構造에 관해 전망해 보기로 한다. 中共은 80년대에 들어와 農業生産이 비약적인 확대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주로 責任生産制의 導入 등 制度改革의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耕地面積이 한계에 다다른 경향이 있는 데다가 財政的 制約으로 農業投資의 확대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준의 높은 勞動生産性의 伸張을 유지하기는 곤란하고, 80년대 후반 이후 농업생산

의 伸張率이 둔화할 可能性이 높다. 이에 따라 工業으로의 轉換이 다시 강화되고 90年代에는 投資率의 회복과 더불어 工業生産比重이 50% 수준을 넘어서 經濟成長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工業間 比重의 불균형은 輕工業重視의 조정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정되어 가고 있지만 國際分業을 활용한 經濟效率의 向上을 추구해 나간다면, 勞動集約産業의 比較優位가 높은 中共에서 소비재 산업의 비중은 한층 높아질 것이며 資本財生産比重이 저하할 것이다.

또한 中共은 경제성장의 진전에 따라 交通·通信, 商業, 金融·保險 등 3次産業의 擴大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生活水準의 향상에 따르는 개인소비증대에 의하여 서비스部門도 서서히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貿易面에서 살펴본다면, 中共은 1980年 基準으로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1%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최근에는 日本의 제2 輸出市場으로까지 성장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對外開放政策에 따라 對外貿易이 활발해지고 있다. 앞으로 對外貿易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貿易依存度를 높여 간다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太平洋地域經濟 특히 國際分業體制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이다.

貿易構造를 보면,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1次産品의 수출은 國內需要壓力이 증대됨에 따라 輸出餘力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2000년에도 農産加工品과 非耐久消費財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資本財 및 中間財의 輸入은 오히려 확대될 것이다. 이 경우에 美國을 중심으로 資本財의 競爭力을 높여가고 있는 아시아 신흥공업국들과는 補完的 分業關係를 형성,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中共이 非耐久消

費財의 競爭力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農產加工品 뿐만 아니라 노동집약적 공업제품분야에서도 인근 제국, 특히 ASEAN과의 경합관계가 첨예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經濟特區를 비롯한 沿岸開放地域에 外資企業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技術 및 經營技法 등의 이용이 순조로이 진행된다면 家電製品을 위시한 내구소비재의 수출이 차츰 신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韓國, 台灣 等 아시아 신흥공업국과 일부 경합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中共은 아직 外貨導入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電力, 交通, 通信 등 社會間接資本을 정비하고 外資企業에 대한 우대조치를 한층 개선하며 關係法令을 정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뭏든, 거대한 國內市場을 가지고 있는 中共이 對外開放政策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積極的으로 國際分業體制에 參加함으로써 太平洋地域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產業構造의 高度化 및 多樣化를 促進시킬 可能性이 높으며 인근지역은 물론 世界經濟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나가게 될 것이다.

한편, 中共의 經濟規模는 GNP 3,800億 달러의 現水準(日本의 3分의 1水準)으로부터 2000年代는 約 1兆 달러수준으로 現在의 日本과 맞먹는 經濟規模로 成長할 展望이다. 이에 따라 일인당 GNP도 85～90年間 年平均 6.0%, 90～2000年間 年平均 5.8% 成長으로, 2000年代에는 1,000달러 水準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13)]

---

13) 美CIA, 日本 經濟企劃廳 발표 종합

2. 臺灣內部의 變化

가. 台灣政治體制의 當面課題와 向後 展望

國民黨政府는 台灣으로 옮겨온 이래 지금까지 戰時政府로서의 權限을 행사하고 있다.[1] 台灣政府는 戰時權力으로서 統師權, 緊急權, 戒嚴權, 軍事裁判權 및 戰地政務權 등을 행사하면서 강력한 總統制를 실시해오고 있다. 總統의 權限은 일찌기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울 만큼 막강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점때문에 현 蔣經國總統 이후의 후계자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상의 이유에 덧붙여, 현재 台灣에서 후계자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現總統의 重患과 內部政治의 불확실성에 있다. 現總統은 蔣介石의 후광아래 군부 및 행정관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984年 2月 台北市에서 개최된 第7回 國民黨大會에서 第7代 總統에 再選되면서 台灣出身인 李登輝 台灣省主席을 副總統에 指名, 選出하였다. 현재 蔣總統은 74세의 고령으로 이번 임기를 무사히 넘길지 우려를 낳고 있으며, 만일의 경우 副總統이 總統의 地位를 계승하도록 되어 있는 現行憲法에 따라 台灣出身이 總統이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台灣의 종래 支配體制가 시의 적절하게 總統制와 內閣責任制를 엇바꿔 실시해온 前例를 감안해보면, 李登輝가 總統으로 취임한

---

1) 현재 台灣政府는 「動員戡亂時期時條疑」(일명 「臨時條疑」 및 戒嚴令 실시중임.

다해도 實權의 장악보다는 명목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李登輝의 副總統 선출은 現政治體制에 불만을 갖고 있는 「本省人(대만출신)」에 대한 배려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4年 新內閣 발족에 즈음하여 대만출신자가 과거 5명으로부터 7명으로 증가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현재, 지배적인 관측에 따르면, 蔣經國總統이 사망할 경우 台灣의 政治體制는 國民黨, 政府, 軍部, 그리고 政治作戰部隊의 重要人物을 중심으로 하는 集團指導體制로 변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蔣總統의 有故時 軍事政權이 들어설 것이라는 추측도 있으나, 軍에 대한 政治的 統制가 制度化되어 있어서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2] 다만, 軍部指導者들이 軍의 强制力 動員에 의한 권력장악이 아닌 憲法 테두리안에서 그들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할 것이라는 展望은 배제되고 있지 않다.

요컨대, 蔣經國總統 이후 台灣政治體制는 單一指導體制 출현이나 軍部쿠데타 方式에 의해서 보다는 黨, 政, 軍의 主要人物이 망라된 集團指導體制로 나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集團指導體制가 들어설 경우, 당분간 台灣政局의 運用에 별다른 차질을 가져오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며, 中長期的으로 볼 때는, 寡頭體制로의 전환이 모색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은 國民黨體制의 台灣土着化問題이나 현재 台灣을 통치하고 있는 國民黨政府의 正統性은 1947년 中國本土에서 제정된 憲法에 근

---

2)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82.12.17, p.36.

거하고 있다. 台灣政府의 組織도 1947年의 憲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그 당시 선출된 인사들이 그대로 台灣에 건너가 주요 權力機關을 장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台灣出身의 政治參與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國民黨政府는 台灣을 本土收復을 위한 잠정기지로 간주, 中國 本土에서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必要性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國民黨政府는 1948年 中國本土에서의 선거에 의해 中國全體를 대표한다는 法的根據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수정 또는 약화되는 것은 물론 만일의 경우 台灣人들이 대거 선출되는 것을 우려해왔다. 이 때문에 1948年에 中國本土에서 선출된 國民大會, 監察院 그리고 立法院 議員들의 數가 노령과 질병으로 감소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國民黨政府는 재선거 실시를 지연시키고 있다.[3)]

國民黨政府가 台灣에 건너간 후 正統性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1960年代부터였으며, 특히 70年代末 美國과 中共이 國交를 正常化하기에 이르자 내부적인 반발은 심각할 만큼 비등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對外的인 정세변화에 있는데, 美中共 國交正常化에 따라 台灣이 外交的으로 고립되고, 台灣內部에서 國民黨政權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國民들의 政府에 대한 신뢰에 위기를 가져온 것이었다. 또한, 國民黨政府의 至上課題인 本土收復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

3) 그 때문에 台灣當局은 第1回 선출자(本土에서의 선출자)의 임기를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1969년 이후 4회에 걸쳐 선거가 가능한 台灣地區에 대한 缺員의 補充 및 定員의 增加措置를 취해 왔다.

따라서, 國民黨政府의 台灣에 대한 장기집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政治集團內部의 상황변화이다. 國民黨에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無所屬 政治集團들은 國民黨政府의 一黨體制, 代議政治擴大實現의 遲延을 비롯한 言論自由의 制限을 비판하면서 政治自由의 확대를 주장해 왔다. 國民黨政權에 대한 反體制運動은 주로 台灣人들이 주동이 되어 台灣人의 政治參與擴大를 요구할 뿐 아니라 台灣과 中共의 分離運動으로까지 번져 나가고 있으며, 1979年 12月 이른바 '台灣그룹'의 高雄地域 政治示威가 그 전형적인 예이었다.[4] 在野勢力은 國民黨政府에 대하여 「民主, 自決, 救台灣」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중 「自決」이란 사실상 「台灣獨立」을 주장하는 것으로 크게 주목되고 있다.[5] 이 「自決」의 요구는 美上院外交委員會가 採擇한 '台灣의 將來에 관한 決議案' 중에 대만의 장래가 대만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와 관련이 큰 것으로 해석하는 측도 있다.

台灣 最大의 內政問題는 台灣人들의 意志가 政治에 직접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당국은 현재도 戰時狀態에 있다는 해석아래, 憲法을 포함한 諸法律의 효력을 크게 제한하면서, 現台灣政權이 「中華民國政府」로서 中國全土를 대표하는 政權임을 自任하고 있어, 台灣住民의 民意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中華民國政府」와 그 下部에 「台灣省政府」라는 2重構造의 現政治體制를 현실적으로 개조하

---

4) John F.Copper, "Taiwan in 1980 ; Entering a New Decade", Asian Survey, Vol, XX I, No.1 (January, 1981), pp. 52 - 55.

5) 1984.4.10. 台灣行政院은 「自決」에 관한 立法委員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自決」문제는 명백히 憲法에 위반되며, 台灣獨立分子에게 이용당하는 것으로서 中共에게 台灣侵攻의 구실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中央日報(台北), 1984.4.11. 자세한 경위는 Roger Rumpf, "Taiwanese Have Their Own Ideas", Int'al Herald Trilune, April. 30. 1984, 참조.

여 台灣住民의 意志를 직접 정치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台灣의 내부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重構造」의 지배를 중지하는 것은 단순히 台灣政權이 「中華民國政府」임을 부정하는 것일 뿐아니라, 대만이 神聖不可侵의 領土의 一部라는 主張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두개의 中國」을 인정하여 台灣의 獨立을 추구하는 행위로 풀이될 수 있다.

中共은 일찍부터 台灣當局이 「한개의 中國」이라는 입장을 알관하여 견지하면서, 台灣獨立에 반대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해 왔으며[6], 台灣當局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한 中共과 台灣間 平和交涉의 可能性이 存在한다는 확신을 가져왔다. 따라서 만약 대만이 이러한 입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中共과 台灣間 平和交涉의 가능성은 극히 작아질 것이다. 中共은 台灣에 대한 武力侵攻을 하게 될 경우의 하나로서 台灣의 獨立을 선언할 경우를 들고 있다.[7] 台灣當局으로서는 2重構造의 支配를 중지하는 것이 「民主」를 促進하여 民心을 장악하는 방편이 되는 한편, 中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2重構造의 지배를 중지하면 中共에 武力侵攻의 구실을 주게 되는 딜레머에 직면하고 있다.

---

6) 이에 대한 中共의 평가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79.1.1. 全人代常務委의 「台灣同胞에게 告하는 書」중에 잘 나타남.

7) 1979.7. 羅青長 中國共產黨台灣小組組員은 台灣武力解放의 조건으로서, 台灣이 소련과 수교할 경우, 國民黨통치에 대하여 台灣人民이 항거하여 일어날 경우, 台灣이 和平에 응하지 않고 獨立化를 꾀할 경우 등 세가지를 열거하였다.

나. 臺灣의 對外關係

1984년 6월 현재, 臺灣과 外交關係를 갖고 있는 나라는 25개국에 달하고 있다.(中共은 129개국). 그리고 이들 중 대만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는 나라는 15개국이다. 또한, 주요 국제기구에 中共이 加盟할 경우 加入條件으로 대만추방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많기때문에, 臺灣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의 수는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에 있다. 現在, 臺灣이 加入하고 있는 주요한 국제기관은 아시아 開發銀行(ADB), 國際灌漑排水委員會(ICID), 國際航路會議協會(PIANC), 아시아生產性機構(APO), 國際港灣協會(IAPH), 國際刑事警察機構(ICPO) 등이 있다.

이처럼 臺灣과 國交를 맺고있는 國家 및 臺灣이 參加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점차 減少하고 있으나, 臺灣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갖지 않은 國家들과 文化, 科學技術 등 교류관계를 맺음으로써 臺灣內에 실무관계유지를 위한 連絡事務所를 두고 있는 나라는 20개국에 달하고 있다. 한편, 臺灣은 국교를 맺고 있지않은 37개국에 「中華民國對外貿易發展協會」 또는 「遠東貿易服務中心」등 在外事務所 명목으로 사무소를 설치하여 經濟, 文化, 人士 등의 交流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發給業務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臺灣측의 이러한 努力으로 1983년 10월 現在, 臺灣側에 따르면, 臺灣과 실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國家數는 약 140여개에 달한다는 주장이다.[8)]

註 8) 「中華週報」 1983.10.10.

臺灣의 對外關係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말할 나위 없이 美國이다. 臺灣은 軍事, 經濟를 비롯하여 그 存立까지도 사실상 美國에 크게 依存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레이건行政府 발족 이래 美國은 지속적으로 臺灣과의 友好的 關係를 강조해오고 있다. 1982년 8월에 발표한 美中共 共同聲明 중, 臺灣에 대한 武器賣却을 감소시킨다는 취지가 確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각규모가 증가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83년 5월、中共이 아시아開發銀行(ADB)에 加盟申請을 했을 때, 美國이 中共의 加盟條件에 ADB로부터 臺灣추방이 이유가 된다면 中共의 加盟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취했으며, 동년 11월에는 美上下兩院에서 臺灣을 ADB로부터 추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도 이러한 友好的 태도의 표명으로 보인다. 또한, 동11월에 美上院外交 委員會가 채택한 '臺灣의 장래에 관한 결의안' 중에는 臺灣의 장래가 臺灣 人民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취지가 강조되어 있다. 이는 '臺灣은 中國領土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臺灣問題를 解決하는 것은 中共의 內政問題'라고 하는 中共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臺灣問題를 둘러싼 美國과 中共의 알력이 일층 심화되어 갔다.

臺灣問題를 둘러싼 美中共間의 미묘한 관계는 1984년 3월 레이건 美大統領의 訪中을 계기로 다시 회복되었는데, 그는 방중에 앞서 臺灣問題에 대하여 "새로운 友人(中共)을 구하기 위하여 옛 友人(臺灣)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美國이 사실상 「두개의 中國」政策을 추구하고 있고 美中共間에 당면한 수많은 이해관계로 인하여, 그러한 美國의 政策을 中·

共이 당분간은 묵인할 전망이다. 그러나 美國의 이러한 「두개의 中國」政策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속되어 나갈 것인가가 東아시아 국제정세변화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최근 臺灣의 對外關係중 주목되는 것은 東歐諸國을 비롯한 공산권 제국과의 무역관계 促進의 징후가 보인다는 것이다. 1979년 12월 美·臺灣關係의 단절을 통지받았을 때, 臺灣은 東歐諸國과의 直接貿易을 開放하였으며, 1981년 5월에는 東歐의 經濟人 및 官吏들이 무역교섭을 위하여 臺灣에 入國하는 것을 인정하였고, 1982년 1월에는 東獨,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4개국의 은행과 대만은행이 코레스 契約을 체결, 이들 제국과의 貿易擴大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1983년 2월 共產圈輸入禁止國 리스트로부터 불가리아를 제외하고, 동년 6월에는 다시 베트남, 라오스를 각각 제외시켰는데, 그 결과, 현재 대만의 수입금지국은 소련, 루마니아, 알바니아, 북한, 캄보디아, 그리고 쿠바 등 7個國으로 줄어들었다. 현단계에서 臺灣의 이들 공산제국과의 交易은 무역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政治的 意味가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臺灣이 소련과 직접관계를 맺을 可能性은, 現在 美中共間의 경제, 문화, 방위 등 제관계를 고려할 때, 매우 작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臺灣이 소련이외의 공산제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유사시 외교상의 선택幅을 擴大하려는 의도가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 2000년대 臺灣經濟展望

臺灣은 1970年代 중반이후 연평균 9%내외의 높은 經濟成長率을 보여왔다. 특히 1970年 이후 제조업부문의 높은 成長과 輸出增大에 힘입어 무역수지면에서 지속적인 黑字를 기록하였으며(1974年 제외) 물가도 안정됨으로써 高度成長, 物價安定, 貿易黑字를 동시에 달성해오고 있다.

이러한 高度成長率은 80年代 후반에 접어들면서 다소 감소될 전망이나, 완만한 經濟成長率이 經濟安定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經濟成長이 1980年代 臺灣政府의 政策의 최우선순위인 국방과 국민복지부문의 자원배분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축소내지 제한은 주민들의 政治不滿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臺灣政府는 이점을 대내적 안보면에서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대만경제의 지속적인 成長과 安定問題는 臺灣의 대내외적인 安保問題와 직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臺灣이 輸出主導型 經濟體制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오일쇼크, 보호주의 및 해외시장의 변동 등 세계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드러내게 되는 약점을 안고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臺灣은 輸出이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1984年의 경우 52%를 상회하고 있다(GNP 578억 달러, 輸出 304억 달러).[9] 臺灣은 中共의 세계시장진출에 따라 특히 해외시

---

9) 臺灣行政院主計處 발표.

장의 변동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經濟外交上의 問題를 안고 있다.

臺灣의 주요 貿易相對國은 美國과 日本이며, 總貿易量面에서 臺灣의 이들 나라에 대한 의존도는 50%를 上廻하고 있다. 따라서 臺灣이 향후 外交關係의 악화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美國과 日本市場에 대한 輸出에 제약을 받을 경우, 臺灣經濟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최근 臺灣은 美國의 경기침체 및 보호주의정책의 영향으로 적지 않은 시달림을 겪고 있다.

1984年에 10.9%를 기록했던 經濟成長率이 85年 상반기에는 5.7%로 떨어지고, 輸出伸長率도 전년의 21.2% 증가로부터 정체내지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제조업의 가동율하락과 함께 失業率도 1984年말의 2.77%로부터 금년 7월에는 3.4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臺灣經濟의 問題點에 대한 여러가지 진단이 나오고 있으나, 공통되는 지적은 지금까지 成長을 이끌어온 輕工業 中心의 中小企業 위주의 발전전략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즉, 臺灣은 中小企業을 기반으로 外國企業의 하청을 받아 경공업제품을 輸出한다는 전략을 최대한 활용해 왔으나 후발도상국들의 추격으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臺灣當局者들은 臺灣經濟가 당면한 여건변화로 1) 후발도상국의 추격에 의한 경쟁력약화, 2) 에너지가격의 상승, 3) 기술의 급변을 들면서, 臺灣이 지금까지의 노동집약적 産業에서 자본집약적 産業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强調하고 있다.

따라서, 臺灣經濟의 향후전망은 자본집약적산업의 육성이라는 과제의

수행정도와 크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臺灣 行政院 經濟建設委員會는 1985년 말까지 「中華民國臺灣地區長期經濟發展展望」을 완성할 예정으로 이미 그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00년까지 향후 15년간 연평균 經濟成長率을 6.5%로 計劃하고 있다. 이 초안은 몇차례 수정작업을 거칠 예정인데, 貿易部門의 경우, 輸出과 輸入의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2000年代에 50%로 現在와 비슷하게 잡고 있으며, 現在 黑字를 보이고 있는 貿易收支도 均衡을 겨냥하고 있다.[10]

또한 經濟成長에 따라 資本財의 自給率이 급속히 높아져 輸出이 輸入을 초과하게 되고, 非耐久消費財 및 노동집약적 중간재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반면, 내구성 소비재와 자본재의 경쟁력은 강화되어 工業製品收支의 黑字幅은 더욱 커질 것으로 展望된다. 일인당 GNP수준은 1985年 3,160달러에서 2,000年에는 6,73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나,[11] 美國, 日本 등 先進國과의 所得水準의 절대금액차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산업구조개편에 따라 臺灣의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됨으로써 현재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美, 日등 선진국과의 무역마찰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적지 않다. 그리고, 비내구소비재의 경우도 아세안국가 및 中共의 경쟁력이 급속히 擴大되어 감에 따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

10) 1984년 수출비중은 58%, 수입비중은 45%, 무역흑자 85억 달러

11) 21世紀 太平洋地域 經濟構造研究會 編, 「太平洋時代의 展望」, (1985.7. 東京) 참조.

3. 中共·臺灣關係의 變化展望

가. 中共의 홍콩問題 解決方式

홍콩의 장래 地位問題를 둘러싸고 1983년 7월 이래 무려 22회에 걸쳐 열렸던 中·英交涉은 '84年 9月 26일 공동성명 발표에 의해 일단락을 보았다. 대처英首相이 訪中하여 동년 12월 19일에 合意書가 정식 조인됨으로써 홍콩은 완전히 1997년을 향한 移行期로 접어 들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중공으로서는 租借期限이 만료되는 1997년 이후 영국의 지속적인 홍콩지배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동시에 홍콩의 번영을 손상하지 않고 홍콩을 中共의 주권아래 회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인 것이다.

1) 1國家 2體制

홍콩問題의 解決에 대한 中共의 기본적 구상은 "1國2體制"論이다. 이러한 구상이 맨처음 제기된 것은 1978年 12월의 三中全會(제11기 黨中央委第3回 全體會議) 이후의 일이다.[1)]

원래 대만문제 解決을 위한 지침으로 제기되었던 "1國2體制"구상은 社會主義 中共과 資本主義 臺灣의 併存을 可能케 하기 위한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대만을 고도의 自治權을 갖는 "特別行政區"로 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1979년 1월 1일자 「人民日報」는 일

---

1) '一個意義 重大的構想', 「眺望」 1984년 10월 15일자.

면 톱기사인 "臺灣同胞에게 告하는 書"에서 조국통일의 필요성과 방침을 호소하였고, 또한 '81년 9월 30일에는 葉劍英 全人代常務委委員長이 "兩黨이 대등하게 第3次合作의 실행에 관해 회담할 것을 건의하는"취지의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2] 中共의 이같은 적극적인 대만에의 조국통일어프로우치 가운데서 클로즈업되어 온 것이 "이른바 "1國2體制"를 전제로 한 "特別行政區"구상이었다.

葉劍英委員長의 담화는 모두 9개 항목에 걸친 것이었는데, 그중 주요항목을 보면, ①國家의 통일 실현후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고, ②軍隊를 보유할 수 있으며, ③중앙정부는 대만의 지방사무에 간섭하지 않고, ④대만의 現行 社會·經濟制度를 변경하지 않으며, ⑤외국과의 經濟·文化關係를 변경하지 않고 ⑥個人의 재산, 가옥, 토지, 기업의 소유권과 합법적인 상속권 및 外國의 투자는 침범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제창되고 있다. 이들의 법적근거로서 1982년 12월의 중공 개정헌법 제31조에서 "國家는 必要에 따라 特別行政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 必要性에 따라 제기된 구상을 法的으로 뒷받침하도록 한 조치였다.

한편, 中共의 對香港政策은 1983년에 발표된 鄧小平의 「20字方針」[3]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 〈中英共同聲明〉의 根幹을 이루게 되었다. 그 內容은, 〈收回主權〉— 1997년에 홍콩의 주권을 회

---

2) '建設舉行 兩黨對等談判實行 第3次合作', 「人民日報」, '81년 10월 1일자.

3) 「爭鳴」, '83년 9월호

수한다(홍콩의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회수를 앞당긴다).

〈〈成立特區〉－香港特別行政區를 설치한다. 단, 自治나 獨立은 아니다.

〈港人治港〉－中央의 통일적 지도 아래 홍콩의 주민이 홍콩을 다스린다.

〈幾個不度〉－경제제도는 50년간 不變, 自由港은 不變, 金融센터는 不變, 法制는 不變(植民地的 色彩를 띠는 法律條文은 고친다) 등이다.

〈保持繁榮〉－經濟는 지속적으로 부단히 發展시킨다.

이상 5개 項目의 漢字 20字로 이루어진 방침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공이 대만에 대한 平和統一方案으로 제기한 〈1國家2體制〉의 구상－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1省으로서 統一된 후에도 자본주의제도의 계속을 인정한다－을 홍콩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서 대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特別行政區"라는 형태로 法的 보장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구상이 단순한 착상의 차원을 넘는 그 어떤 것이라는 점은 1984년에 와서 명백해졌다. 그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 모택동사상에 등을 돌리고 中共의 현실을 중시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는 論爭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中共의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스탈린流의 「社會主義市場과 資本主義市場의 두가지 시장의 併存」이라는 이론을 부정하고, 世界에는 「資本主義가 우세한 統一市場」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4] 그들은 또한 「제국주의는 장차 滅亡하고 社會主義는 장차 전면 승리한다」고 하

---

4) 그 예로, 官鄕의 學術報告, 「國際的 政治經濟情勢로부터 武漢의 發展前途를 본다」參照 霞山會, 「中國年鑑 1985」에서 再引用.

는 레닌의 帝國主義論을 수정(사실상 부정)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50年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 共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現在는 基本的으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가 併存하는 시기, 즉 1個의 世界, 2개의 제도라고 하는 역사적 시대이다」. 「社會主義制度와 資本主義制度는 兩立하지 않으며, 물과 불처럼 서로 혼합되지 않고, 이쪽이 저쪽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저쪽이 이쪽을 먹어버리고 만다는 생각은 50年代의 진부한 觀念이다」, 「2個의 제도가 國際的으로 평화공존할 수 있다면 1國內에서도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北京의 저명한 國際問題나 經濟의 專門家들의 發言이다.[5]

아뭏든 1984년 9월 26일에 假調印된 「中英間의 홍콩問題에 관한 共同聲明」에 명시된 홍콩의 장래의 지위는 軍隊의 保持를 제외하면 1981년 9월 30일 中共이 대만에 제안했던 9個 項目의 條件과 基本的으로 다른 點은 없다. 대만측으로부터 거절된 구상을 홍콩에서 먼저 실행하여 옮아간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한, 현상유지라는 中共의 對香港政策은 꽤 信賴할 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中英共同聲明(合意書)이 지켜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중국의 統一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에 바탕을 둔 "1國2體制"에는 理論的인 뒷받침이 별로 없고 1982년 개정헌법의 규정과도 합치되지

---

5) 「文匯報」, 香港 1984. 3. 29일자 및 30일자.

않은 점에 여전히 問題가 남아 있다. 1982년 12월 4일에 채택된 中華人民共和國憲法은 第1條에서 「社會主義制度는 中華人民共和國의 根本的 制度이며 그 어떤 조직 혹은 個人이라 해도 社會主義制度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주권회복후의 홍콩에서 50년동안이나 資本主義制度가 유지되는 것은 憲法의 基本精神과 合致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으로서는 물론, 홍콩人들에게 있어서도 당장에는 최선의 해결방법으로 생각되는 "1國2體制論"에도 이러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홍콩인들 중에는 장차 中共國內에 理論鬪爭의 소지가 남아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6)]

그동안 中共의 대외개방정책의 수행방식이, 우선 실험적으로 시행하고 난 후, 法律을 정비하는 식으로 운용해온 점을 고려하면, 特別行政區의 운영도 그 法的根據(憲法 第31條)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2) "港人治港"의 特別行政區

中英間의 合意書는 본문과 3개의 부속문서(①中共政府의 홍콩에 대한 기본방침 정책에 관한 구체적 설명, ②中英合同連絡小委員會에 관하여, ③토지계약에 관하여 등)로 작성되어 있으며 거기에 홍콩인의 國籍에 관한 覺書가 붙어 있다.

共同聲明이라는 형태로 발표된 合意書의 內容은 中共側이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해 온 것과 基本的으로 차이가 없다. 다만 종래에는 불명확했던 土地使用權이나 國籍問題가 明確하게 된 점은 새로운 진전

---

6) '新情勢下看一國兩制', 「九十年代」 84년 11월호.

을 본 것이라 하겠다. 合意書는 영국이 홍콩 전체 영토의 주권, 統治權을 반환하는 것을 보증으로 하여, 中共이 英國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英國이 지지하는 홍콩人의 民意를 可能한 한 수렴한 것에 의한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로 홍콩인의 民意를 비교적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合意書의 요지는 英國이 全香港의 주권, 행정권을 반환하고. 그에 따라 中共이 주권회복후에도 서기 2047年까지의 50년간은 現在의 社會·經濟制度를 유지한다는 것인데, 본문의 內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97년 7월 1일부터 中共이 主權을 회복한다.

② 홍콩은 中共憲法 第31條의 규정에 기초하여 "特別行政區"로 한다.

③ 現行 法律, 社會·經濟制度는 基本的으로 不變이다.

④ 特別行政區는 現地人에 의해 구성되며, 행정장관은 선거 또는 협의에 의해 선출하고 中共이 임명한다.

⑤ 自由港, 獨立關稅地區 및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를 保持한다.

⑥ 재정의 獨立을 保持, 中共은 홍콩으로부터 徵稅하지 않는다.

⑦ "中國香港"이라는 名稱으로 獨自的으로 각국·지구, 국제기관과 經濟文化協定을 체결할 수 있다.

⑧ 英國 및 諸外國의 經濟的利益은 배려된다.

⑨ 治安은 特別行政區政府가 책임진다.

⑩ 本文, 附屬文書의 內容은 香港特別行政區 基本法에 규정되며, 同規定은 50年間은 不變이다.

⑪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관리는 英國이 책임을 진다.

以上의 本文에서 나타난 中共과 홍콩의 關係는 行政長官의 선출방법을 제외한다면, 요컨대 中共이 종래의 英國의 자리를 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홍콩에는 外交權(중앙인민정부가 외교사무를 관리한다), 장관의 임명(중앙인민정부가 임명), 군대의 保持(방위담당부대는 중앙인민정부가 파견), 민간항공운수협정체결(중공정부가 체결)등의 諸權利는 없고 이러한 일들은 모두 中共政府가 特別行政區政府와 협의하여 處理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홍콩人의 民意는 어느 정도 수렴되어 있다고해도, 合意書 가운데 규정되어 있는 홍콩은 法的으로는 어디까지나 중앙인민정부(中共)의 변칙적인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中英共同聲明은 國際條約으로 되어있지만 1997년 이후의 홍콩特別行政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은 중앙정부인 中共의 생각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1997년 이후, 홍콩問題는 中共의 內政問題로 귀속될 可能性이 농후하기 때문에 現在 홍콩에서는 1997년까지 그 이후의 行政의 기본틀을 짜놓으려는 움직임이 지식인층간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中英間의 懸案事項으로 되어 온 토지의 계약기한에 관해서는 제3附屬文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즉, 계약기간이 1997년 6월 30일을 넘는 모든 토지계약 및 관련된 모든 권리는 계속 보호되며, 계약기한이 1997년 6월30일 이전의 것도 연장이 可能토록 되어 있다. 또한 1997년 6월30일까지 香港政廳은 서기 2047년 6월30일을 期限으로 하는 신규토지계약을 許可할 수 있다. 단, 政廳에 의한 신규借地는 연간 50 ha을 限度(공공주택용지는 제외)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政廳이 1997년 6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의해 획득한 追加借地料 收入은 土地開發平均코스트를 빼고 난 잔액을 1/2로 나누어 각각 홍콩경청과 장래의 홍콩특별구정부의 소유로 한다는 것도 명기되어 있다.

土地問題와 아울러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던 국적문제는 合意書의 맨 마지막 覺書부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國籍法에 따라 홍콩의 중국동포는 「英國屬領公民패스포트」의 소지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中共의 公民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81년 가을에 英國은 인구유입을 억제할 目的으로 國籍法을 改正, 公民을 영국공민, 英國領公民, 英國의 해외공민의 세가지로 나누었다. 그 時點에서 약 270만명으로 추산되는 英國籍香港人은 모두 英國領土公民으로 되었다. 따라서 英國公民籍을 所有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이외에 홍콩人의 大部分이 中共公民으로 된다.

제 2부속문서에는 中英合同連絡小委員會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委員會는 결국 中英兩國間의 連絡, 정보교환, 협의의 必要上 設置된 것이며, 行政的인 權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장래 지위를 둘러싼 中英交涉은 '82년 9월 대처首相의 訪中으로 시작되었지만 그후 '83년 7월부터 실무레벨의 交涉에 들어가 '84년 9월 5～6일의 第22回 會談까지는 대처訪中으로부터 약 2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더우기 제2라운드인 실무회담은 일체내용을 공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담내용의 성과를 둘러싸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여 적어도 '83년 11월 14～15일의 제6회 會談까지는 經濟活.

動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7] '84년에 들어와서부터 交涉은 순조롭게 진전되었고, 4월에는 영국外相이 中共을 방문, 英國이 전홍콩의 주권을 반환할 의도가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동안 중공측으로부터는 몇 번인가 홍콩의 장래에 대한 中共의 구상이 밝혀졌으나 '84년 7월 하우英外相의 두번째 訪中을 거쳐 9월26일에 공표된 合意書는 거의 中共이 주장해 온 그대로의 內容이 되었다.

아뭏든 인구 530만의, NICS의 中核이며, 또한 世界的인 금융센터의 하나로서 經濟的으로도 많은 가치가 있는 植民地, 홍콩의 반환이 테이블 협상만으로 解決되었다는 것은 歷史的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社會主義를 표방하는 中共이 주권회복후 50년간이나 왜 홍콩의 자본주의체제를 존속시키지 않으면 안되는가, 또한 교묘한 植民地經營과 外交術에 뛰어난 英國이 왜 割讓地인 九龍, 香港地區를 일괄 반환하는 것에 응했는가, 하는 등의 問題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中共의 對外經濟政策과 홍콩의 比重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中共에 있어서 홍콩은 대만統合모델의 하나이다. 主權회복후의 홍콩에서 中共이 資本主義體制를 50년동안이나 유지하고 게다가 번영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의 하나는 그곳에서 대만에 제시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의 "特別行政區"구상을 실험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

7) 단적으로 香港달러價의 下落(홍콩달러를 매각, 美달러를 매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매우 정치적인 요인과 아울러 홍콩의 社會構造 그 자체가 社會主義化에 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보다 현실적인 問題도 중요할 것이다. 홍콩의 인구구성을 보면, '83년말 現在 거의 60%가 홍콩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며, 그들의 부모들은 거의가 어떤 이유로 大陸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다. 홍콩人의 대부분이 강렬한 中國人으로서의 民族意識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 35년 동안 中共의 社會主義政權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영국식의 교육, 비지니스감각을 몸에 익히고, 자유방임정책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에게 사회주의를 理解시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터이다.

中共은 '82년 가을 이래 홍콩으로부터의 訪中者에 대해 그때마다 「홍콩의 번영과 발전을 유지한다」고 약속해 왔으나 적어도 '83년 10월 19~20일에 개최되었던 第2次交涉 제5회회담 이전에는 '홍콩의 현재의 번영'이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가를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콩經濟發展의 원동력이, 통칭 "自由港"이라 불리우는, 경제학교과서에만 이름이 남아 있는 古典派經濟學의 資本主義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中共이 英國과의 關係만의 外交問題로서 홍콩問題를 處理하려 했던 것은 홍콩人의 民意가 社會主義中共에 吸收되기 어려웠다는 것만이 그 이유는 아닐 것이다.

'83년 10월 11~12일에 개최된 第12期 黨中央委全體會議를 고비로 中共의 英國에 대한 비난이 진정되었고, 그 후에는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홍콩인의 民意를 반영시킨다는 취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 變化의 배경에는 國內的인 要因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中共측

의 강경한 자세에 대해 미국달러의 매입이라는 경제적수단으로 대항한 홍콩인들의 반발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로서 中英間의 合意書는 홍콩인들의 민의를 반영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中共이 홍콩의 현상유지를 시인한 또 하나의 이유는 經濟的인 것이라 하겠다. 中共의 근대화에 있어서 홍콩은 이미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금, 정보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中共과 홍콩과의 經濟交流는 '78년 이래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83년의 실적으로 본다면 홍콩은 中共의 무역파트너로서 輸出에서는 제1위, 輸入面에서는 日本 다음으로 제2위를 점하고 있다. 이 무역거래를 통해 中共의 收入은 '82년 211억HK달러(약35억美달러), '83년 244억 HK 달러(약34억달러, HK달러價의 下落으로 인해 美달러환산으로는 감소)에 달했다. 홍콩으로부터의 收入은 무역수입만이 아니라 中共의 對香港投資收益, 관광수입, 화교송금 등이 있다. 香港大學의 Y.C.Jao 교수의 추계에 의하면, '79～'80년의 收入은 각각 8～9억美달러, 8～10억美달러 및 5～6억美달러에 달하고 있다.[8] 中共에의 직접투자가 가능해진 것도 그 이유의 하나로 화교송금은 그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對香港投資는 매년 擴大되고 있기 때문에 '83년도 中共의 投資收益은 15억美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中共이 홍콩으로부터 얻는 외화수입은 '83년에는 적어도 60억美달러에 달한

---

8) 'HongKong's Role in Financing China's Modernization', 「China and Hongkong - the Economic Nexus」, H.K., Oxford Univ. Press, 1983. p.58.

것으로 보이나, 同年末 中共의 외화준비고가 143억美달러('84년 9월末에는 166억美달러)였음과 비교하면 외화소스로서의 홍콩의 중요성을 理解할 수·있을 것이다.

홍콩은 中共에 있어서 단순한 外貨獲得뿐만이 아니라 뉴욕, 런던 다음의 큰 금융센터인 홍콩은 資金의 조달·운용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무역면에서 中繼港으로서의 홍콩의 역할도 중요하며, '83년의 예를 봐도 홍콩에 輸出된 중공산품의 46%는 재수출되고 있다. 역으로 각국의 공업제품이 홍콩을 통해 中共에 輸入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국교가 없는 諸國의 산품도 포함되어 있다. 요컨대 中共은 홍콩이라는 장소를 통해 정치와 經濟를 교묘히 분리하여 使用할 수가 있는 것이다.

經濟特區開發資金의 주요 공급선으로서의 홍콩의 지위도 또한 중요할 것이다. 深圳特區에 국한해서 보면 개발자금의 90%는 홍콩資金이라고 한다. 中共이 開發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廣東省의 深圳 珠海, 汕頭, 福建省의 廈門)는 '78년 이래 추진되고 있는 中共의 對外經濟開發政策의 모델이며, 深圳은 더우기 그중의 모델이기도 하다. 深圳經濟特區는 당초엔 發展된 資本主義經濟인 홍콩을 國內에 받아들임에 있어서 완충기적 역할이 기대되었고, 또한 外資의 導入을 통해 경영노우하우, 工業技術, 情報 등의 창구적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역할은 지금도 여전히 重要하지만 이보다 '84년에 들어와서부터는 深圳經濟特區에 있어서의 經濟政策, 經濟制度 그 자체가 하나의 선진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4년 4월초순에 中共은 북쪽은 大連市에서 남쪽은 北海市까지의

14개 항만도시를 개방, 準特區지정과 아울러 外資優待措置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9] '84년 1월하순부터 2월초순에 걸쳐 鄧小平黨顧問委主任을 비롯한 당수뇌들이 深圳, 珠海, 廈門 등의 각 特區를 순회한 뒤 14個 항만도시의 개방과 廈門經濟特區의 擴大(2.5㎢에서 廈門 全市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深圳特區의 경영으로 자신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10] 그러나 深圳特區에 있어서의 대담하기까지 한 경제개방은 들려오는 얘기만큼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을성 싶다. 그것은 深圳經濟特區가 인접한 홍콩經濟를 모델로 한 부분이 많고, 거기에서 시험되고 있는 것은, 資本主義經濟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特區에 있어서의 개방정책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경제운영을 대폭 도입한 經濟特區의 개발·발전은 그것이 개방도시뿐만 아니라 현재 중공이 추진중에 있는 경제체제개혁의 모델로 되고 있는만큼 失敗는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特區開發의 資金소스이며 또한 개방모델의 원형인 홍콩의 번영은 中共의 대외경제개방정책에 있어서 불가결한 要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홍콩의 주권회복후의 상황에 대해 中共은 공식적으로 "1國2體制"로 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1國3體制"라고 할 수 있다.

---

9) 14개 항만개방도시는 大連, 秦皇島, 天津, 煙臺, 靑島, 連雲港, 南通 上海, 寧波, 溫州, 福州, 廣州, 湛江, 北海 등이며 '84년 3월26~4월6일에 개최된 "沿海部分城市座談會"에서 결정되었다.

10) '一項重要決定的誕生－對外開放的新步驟', 「眺 望」, '84年 6월 11일호 參照.

이를테면 '97년 이후의 中共에는 社會主義(國內), 國家資本主義(特區), 및 資本主義(홍콩)등 3個의 體制가 共存하는 것으로 되는 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國家資本主義란 國家의 관리하에 있는 資本主義란 뜻이며, 深圳特區의 경우는 인민정부의 관리하에서 市場經濟를 主軸으로 하는 經濟政策을 실시함을 의미한다.

최근 中共은 深圳特區에 있어서 大幅的인 自由價格의 導入을 꾀한다든지, 물가 그 자체를 國內市場價格과는 분리하여 國際市場(구체적으로는 남쪽에 인접한 홍콩)에 연계시킨다든가 나아가서는 特區독자의 통화발행이나 外資銀行業務를 인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深圳特區에 國內와는 獨立한 市場體系의 형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 따라서 深圳特區는 현재 추진중인 경제체제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中共의 臺灣統一政策과 향후 展望

中共이 臺灣問題 解決을 위하여 積極的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國內的으로는 第11期 3中全會에서 現代化路線이 실질적으로 확정되고, 대외적으로는 美國과 國交正常化가 이루어진 1978년 12월 이후이다.

中共과 공식적인 外交關係의 수립으로 美國은 臺灣이 中國의 일부

---

11) 特區의 가격체계에 관해서는 楊志和 '特區物價與國內 脫鈎與國外桂鈎', 「港澳經濟」, '83년 第1期, 금융에 관해서는 '深圳金融架構醞釀巨變', 「信報」紙, '84년 12월10일자 참조.

임을 法的으로 확인하게 됨으로써 自由中國은 美國으로부터 大使館을 철수해야 하는 등 國際法上 國家의 地位를 상실하고, 1954년 美國과 自由中國사이에 체결된 相互防衛條約도 당연히 폐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臺灣問題는 中共의 內政問題로 취급되게 된 것이다.

美國과의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中共은 臺灣統一工作에 착수하였는데 鄧小平은 국교정상화의 공동성명에 조인하는 자리에서, '금년중 平和的으로 臺灣을 統一할 의향을 표명하고, 臺灣이 무기한 統一交涉을 거부하는 경우 武力行使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어서 1979년 1월 1일 中共의 全人代 常務委員會는 '臺灣同胞에 告하는 書'를 공표하였다. 그 내용중에 '臺灣의 統一에 있어서 臺灣의 現狀과 臺灣各界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 政策을 시행함으로써 臺灣人民에게 결코 손해를 주는 일은 일체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기타 우편물 교환, 친척 및 親友의 방문, 학술·文化·스포츠의 交流 등과 아울러 交易 및 經濟交流의 擴大를 호소하였다. 이와 함께 國防部長 徐向前은 1979년 1월 1일부터 金門島, 馬祖島 등 臺灣측이 장악하고 있는 섬에 대한 포격을 중지한다고 言明함으로써 軍事對決의 자세를 완화하였다. 또한 1979년 1월 9일 鄧小平은 美上院議員團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臺灣問題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가운데 첫째, 祖國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臺灣의 무장해제는 必要없으며 統一후에도 保安部隊의 유지는 許容할 방침이다. 둘째, 統一후에도 臺灣人民이 희망하는 기간, 완전한 自治權을 행사할 수 있다. 세째, 統一후에도 臺灣當局은 현재 갖고 있는 權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선

언하였다. 이어서 동년 1월 16일 鄧小平은 北京의 人民大會堂에서 「當面情勢와 任務에 관하여」 연설하는 가운데, 黨의 당면임무에 대하여 첫째, 反覇權, 둘째 祖國統一, 세째 4개현대화의 촉진을 지적, 강조하였다.

그 후 中共은 '第3次 國共合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9項目提案」을 공표하였는데, ①合作을 위한 國共兩黨의 交涉開始, ②우편물 교환, 관광, 문화교류에 대한 상호편의 제공 ③統一후 臺灣을 特別行政區로 하여 自治權을 갖고 軍隊도 保有, ④臺灣의 社會·經濟制度의 불변, ⑤臺灣當局 및 각계 대표의 中共指導部 참여, ⑥臺灣에의 財政援助, ⑦臺灣住民의 大陸 自由往來 ⑧臺灣各界의 大陸投資保證, ⑨統一에 관한 臺灣측의 적극제안 환영 등으로 되어 있다.[12] 이어서 胡耀邦 黨主席은 蔣經國을 包含한 臺灣政府要人 14名에 대하여 中共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1981.10.9)

이에 앞서 1981년 5월 15일 「祖國統一 6個原則」을[13] 밝힌 바 있는 鄧小平은 1983년 6월 臺灣의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구상으로 이른바 「和平提案」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和平提案」은

1) 統一後 北京은 대만에 軍隊를 진주시키거나, 대만을 접수하는 것

---

12) 「9項目提案」은 1981년 9월 全人代 常務委員長 葉劍英이 新華社를 통해 공표.

13) 「6個原則」의 內容은 ①대만의 현정권 허용, ②대만인의 현생활수준 유지보장 ③대만에 대한 외국투자보장 ④대만의 군사력 유지보장 ⑤대만지방정부의 인사결정권 인정, ⑥대만의 대외관계 유지보장.

은 아니다. 2) 통일후 대만은 독립적인 立法權을 보유할 수 있다. 3) 統一後 대만은 독자의 司法權을 가질 수가 있다. 4) 統一後 대만은 독자의 外事權 및 對外經濟關係를 유지할 수 있다. 5) 臺灣은 「中華人民共和國」의 호칭을 使用할 必要는 없다. 6) 統一後 臺灣은 三民主義 또는 資本主義를 실시할 수 있다. 등의 內容으로 一見 統一後 대만의 獨立性을 강조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1984년에 들어와 中共의 臺灣에 대한 統一協商提案중 주목되는 것은 中共이 臺灣에 대하여 '多元制國家'(1國2體制)이론에 따른 협상제안을 했다는 사실이다.[14] 즉, 鄧小平은 1984년 4월 레이건 美大統領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中共은 統一된 國家案에 두개의 다른 制度가 存在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臺灣問題解決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共은 美國과의 外交關係 樹立을 계기로, 종전의 '武力에 의한 臺灣解放'方式을 버리고 平和的인 統一政策으로 전술적 전환을 단행한 이래, 비교적 구체적이며 절충적인 성격의 제안을 거듭하면서 臺灣政府에 대하여 보다 관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臺灣政府는 美國과의 斷交 및 中共의 平和攻勢라는 양면으로부터의 충격을 받아 애초부터 中共의 제안에 冷淡한 반응을 보여왔다. 즉 蔣經國總統은 美中共 國交正常化 발표 직후인 1978년 12월 8일 國民黨中央緊急會議를 소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本土의

---

14) 앞 章의 '1國2體制'項 참조.

共產政權과는 결코 協商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臺灣島民에 대하여 結束강화를 호소하는 등 不動의 자세를 과시하였다. 이어서 1980년 10월 10일, 蔣總統은 國共不接觸·不協商·不妥協의 이른바 '3不原則'을 선언하였고, 1981년 4월 5일 國民黨 第12期 全國大會에서는 三民主義에 의한 '反共復國'만이 中國統一의 길임을 결의하면서 國民黨의 「中國統一案」을 제시하였다.[15] 이는 中共의 平和統一攻勢에도 불구하고, 國民黨의 對大陸政策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아울러 대만정부는 대만의 經濟建設의 성과를 積極 홍보함으로써, 中共의 平和攻勢가 國內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극소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現在 中國의 統一問題를 어렵게 하는 要因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첫째, 양측이 모두 「하나의 中國」을 표방하면서도 正統性에 관하여는 한치의 양보도 없으며, 둘째, 대만측이 제12차 國共合作의 역사적 경험을 염두에 두고 뿌리깊은 불신감을 갖고 있으며, 세째, 그동안 대만측의 經濟的 성공과 그에 따른 자신감 또는 中共政權에 대한 우월감 등이다.

現在, 中共은 平和協商에 의한 統一을 내세우면서도 武力統一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中國統一問題는 武力에 의한 解決의 可能性이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며, 그렇다고 臺灣이 國共會談에 응할 可能性도 現在로서는 지극히 적은 것으로 평

---

15) 그 內容은 ① 三民主義를 통한 새로운 中國建設, ② 反共復國行動綱領의 실천 ③臺灣建設의 경험을 통한 統一以後의 大陸再建.

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臺灣의 國際的 고립화가 가속되어 修交國이 감소상태에 있고, 향후 中共의 세계시장 참여확대에 따라 對外市場進出에도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고 있어, 中共과 臺灣의 關係내지 狀況이 현재상태에서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되어 나갈지 의문이다. 따라서 中共의 經濟力과 軍事力이 향후 크게 向上되어 武力에 의한 統一可能性이 증대될 경우, 臺灣측이 國共會談에 응할 可能性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측도 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臺灣問題를 둘러싼 美國의 立場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上海共同聲明이 발표된 1972년 이전부터 臺灣問題는 美中共關係改善을 가로막고 있었던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으며, 양국간 국교정상화에 있어서 臺灣의 安保問題는 핵심적인 問題였다. 1979년 3월 美議會를 통과한「臺灣關係法」(Taiwan Relations Act)은 臺灣에 대한 美國의 立場을 반영한 결과로 출현한 것이었다. 그 주요 內容을 보면, 첫째 美臺灣斷交로 인하여 폐기된 相互防衛條約에 대체되는 '臺灣의 安全保障' 조항이 삽입되었다. 즉 臺灣이 中國本土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美國은 臺灣의 安全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美國과 臺灣의 폐쇄된 大使館에 대신하는 連絡事務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 連絡事務所는 國交正常化 이전 美國과 中共이 워싱턴과 北京에 설치하였던 連絡事務所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일종의 公式外交機構와 같은 것이다. 세째로 美國이 臺灣에 대하여 '防衛用品' (defence articles)과 '防衛用役' (defence services)을 계속해서 제공한다는 特別條項을 삽입하고 있

는 것이다. 이 項目이 中共과 美國間에 論難의 초점이 되는 것인데, 이로써 美國은 臺灣에 대하여 武器를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必要에 따라서는 兵力도 다시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美國과 中共의 國交正常化에도 불구하고 「臺灣關係法」의 출현으로 美國과 대만 관계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 셈이다. 「臺灣關係法」은 中共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美國과 中共의 關係改善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中共의 주장에 의하면, 美國은 「中國은 하나이며, 臺灣은 中國領土의 일부」임을 인정하였으며, 北京政府가 中國의 유일한 合法政府임을 승인하였다. 그러면서도 「臺灣關係法」을 제정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더우기 대만측에 대하여 무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대만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무력행사까지 규정한 「臺灣關係法」의 존속은 명백한 유엔헌장의 유린으로서 '하나의 中國' 하나의 '臺灣'으로 몰고 가려는 美國의 속셈을 드러내는 非友好的인 行爲라고 공격하고 있다.[16]

그러나 「臺灣關係法」으로 인하여 中共의 대만에 대한 무력해방 시도를 저지하는 效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現在 現代化建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中共이, 강력한 방위능력을 갖추고 있는 臺灣에 대하여 무력침공을 감행함으로서 막대한 희생을 치룸과 아울러 對美關係도 위기로 몰아가게 되는 위험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오늘날의 국제권력구조에서 中共에게 백해무익한 결과를 초

16) Zhung Qubing, Zhang Hongzeng & Pan Tongwen, "On the U.S Taiwan Relations Act," China and the World ("Beijing Review" Foreign affairs Series, 1982), p.87.

래할 뿐 아니라, 中共內部에도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요컨대, 中共은 臺灣問題를 둘러싸고 美國과 실랑이를 계속하면서도, 전반적인 對美關係는 우호적인 方向으로 이끌어 갈 것이며, 臺灣의 내부적인 對中共政策變化 可能性과 함께 국제역학구조의 호전을 기다리면서 지속적이고도 다각적인 對臺灣平和攻勢를 집요하게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다. 臺灣·中共間 經濟交流現況과 2000年代 展望

臺灣의 거부로 인하여 中共·臺灣間의 公式的인 交易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홍콩, 싱가폴, 日本등을 경유한 間接交易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며, 中共이 대외개방을 본격화한 1970年代 후반부터는 눈에 띠게 증가하기 시작, 80년대에 와서는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확대일로에 있는 양측간의 현실적인 經濟關係에 대하여, 臺灣측은 이를 不法視하면서도 묵인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 반하여, 中共측은 이를 장려, 환영하는 積極的인 政策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臺灣측은 對中共 間接交易이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내심 수출경기의 호조내지 擴大를 거부하지 못하는 한편, 長期的으로 中共이 臺灣을 經濟的으로 侵略 또는 잠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平和統一攻勢와 함께 한층 경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臺灣

當局과 業界는 中共측이 언제라도 그들의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現在의 注文水準을 믿고 안이하게 시설을 확장하거나 原料 및 在庫를 증가했다가 中共측이 돌연 注文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불시에 困難에 처하지 않도록 對策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中共의 輕工業 消費財 위주의 주문에 대만업계가 순응, 안주하여, 기존산업시설의 대체에 소홀할 경우, 國際競爭力등을 고려, 產業發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中共은 福建省의 厦門經濟特區등 1980년이래 對外開放의 창구가 되고 있는 4개 經濟特區(深圳, 珠海, 汕頭, 厦門) 및 14개 經濟開放都市에서의 대만자본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투자된 臺灣資本에 대하여는 稅制 등 特別優待措置를 취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中共當局은 臺灣의 投資에 의해 설립된 企業에 대하여는, ①利潤이 발생하기 시작한 후 4年間의 所得稅 면제, ②건설과 경영을 개시한 후 5년간 地代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한 中共政府는 1984年 10月, 「臺灣으로부터 交易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福建省의 港口 1個所를 開放하고, 4개 마을에 숙박시설을 설치, 運營해 왔으나 交易이 해마다 增加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시설만으로는 부족하여, 이번에 福州의 厦門에 5個港을 開放하고 泉州, 漳州 등 3個 마을에 臺灣과 홍콩人들을 위한 숙박센터를 설치했다」고 발표하였다.[17] 中共은 대만으로부터 직접 입항한 선박(물

17) 中國工業通訊, 1985.4. "最近アジア反共國と中國の 貿易 進展狀況," p.16. 또한 福建省人民代表大會가 福建省과 臺灣間의 직접무역을 승인하고 省內 9個港口를 交易을 위한 항구로 지정했다는 보도(HongKong 日刊紙 SCMP.85.5)도 있었음.

론 의 경우는 밀수선이다)의 화물에 대하여는 면세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선박의 中共大陸에 대한 직접수출 또한 매년 增加하고 있는 狀況이다.[18] 이에 대해서 臺灣當局도 수출진흥의 立場에서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뭏든, 이처럼 中共측의 다양한 접근책이 주효한 탓인지는 모르나 臺灣·中共間의 貿易은 착실하게 신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만당국은 對中共貿易 - 밀수형태의 직접교역과 홍콩,싱가폴 등을 경유한 간접교역을 包含하여 - 을 공식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제하기 위한 特別한 措置를 취하고 있지 않다.[19]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臺灣政府官吏들이 對中共貿易 擴大 可能性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징후들도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臺灣經濟開發計劃委員會에서 채택한 한 보고서는[20] 中共이 홍콩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하게 되는 1997년 이후에도 홍콩과의 무역거래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이는 부분적으로나마 對中共間接交易의 역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

18) 그 규모는 1984년의 경우, 대략 전년비 15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대만당국에 의해 나포된 밀수선을 토대로 추정한 것임.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85. 5. 9. p.79. 참조.

19) 대만당국은 1985. 6. 홍콩경유 대중공 간접교역업체 3個社 社長 3명을 체포한 바 있으나, 경고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임.
臺灣當局은 기회있을 때마다 對中共交易의 잠재적 위험성을 업계에 경고하고 있음.

20) For Eastern Economic Review, 1985. 2. 28. p.99. 1984년 12월말 매스컴에 그 내용이 누설된 후, 채택이 거부되었다 함.

다음은 양국간 최근 무역동향을 홍콩을 中心으로 한 간접교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양국간 교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밀무역형태의 직접교역, 그리고 홍콩과 싱가폴, 日本을 경유한 간접교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국간의 총교역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현실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만 홍콩통계를 기초로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美國 CIA의 추정발표에 따르면, 1984年 中共·臺灣間 交易規模는 약 8～9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홍콩경유 간접교역액이 5억6천만 달러로 비중이 가장 크다.

홍콩정청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984년 홍콩경유 中·臺貿易은 43억 2,600만HK$) 中共商品의 對臺灣 輸出은 9억 9,900만 HK$ (1.3억US$)에 이르고 있다. 1981년 이후 홍콩경유 양국간 교역추이를 보면, 대만의 압도적인 수출초과를 보이면서, 1981년에 전년비 63.5%가 증가한 26억890만 HK$ (그 중 대만의 수출이 21억 8,200만 HK$, 수입 4억 2,660만 HK$), 그리고 82～83년에는 中共의 경제재조정으로 인해 10억 HK$ 선으로 감소한 후, 1983년 4/4분기 이래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양국간 교역액이 최근 들어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양측의 대외교역규모를 감안하면 아직 그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21] 전문가들은 양국간 교역액이 1985년에는 10억 US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中·臺交

---

21) 양국간 교역규모는 양국의 대외무역액중 1.5% 수준에 불과하다.

易이 증대되어 나가는 배경으로는, 1) 中共의 現代化政策 추진에 따라 衣料의 수요와 함께 통신시설의 개량 必要性이 증대되고 있고, 2) 中共화폐(人民幣)의 평가절하에 따라 홍콩경유 대중공수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만이 中共에 輸出하고 있는 主要 品目은 합성섬유, 방직품 브라운관 등 전자부품, 통신설비, 자전거, 오토바이 및 시계 등이며, 중공으로부터의 수입은 한약재, 야채·과일류, 魚介類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1981～84年間 臺灣의 홍콩경유 對中共간접수출현황을 분석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ITC大單位分類에 따름).

○ 食品類(SITC.0); 1982년 HK$ 625만으로 최고액 기록, 83년 HK$ 455만, 84년 HK$ 502만을 시현.

○ 飮料 및 煙草(SITC.1); 1982년 HK$ 1만, 83년 HK$10만을 기록, 84년에는 매우 미미함.

○ 基本原料(SITC.2): 특히 섬유원료가 주를 이룸. 81年 HK$ 4,172만, 82年 HK$ 2,157만, 83년 HK$ 1,545만 84년 HK$ 1억 149만을 기록. 84年에 전년비 557.06%의 높은 신장율을 보임.

○ 燃料(SITC.3); 81～83년 輸出額 미미함. 84年 HK$ 18만 기록.

○ 動·植物性 油脂(SITC.4); 1983년 HK$ 5천 외에 실적 없음.

○ 化學原料 및 製品(SITC 5); 81년 HK$ 2,834만, 82년 2,749만, 83년 HK$ 1,540만, 84년 HK$ 7,619만 기록, 84년 증

가율은 전년비 394.8 %

○ 原料別 製品(SITC.6) ; 對中共 輸出 대종품목으로 특히 방직품이 제조품의 90 %이상을 차지. 81 년 HK$ 15 억 6,929 만, 82 년 HK$ 9 억 9,711 만, 83 년 HK$ 8 억 3,493 만, 84 년 HK$ 19 억 6,566 만을 기록, 84 년은 전년비 135.4 % 신장.

○ 機械 및 運搬用 機器類 (SITC.7) ; 계산기, 카세트라디오 등 전자제품과 특수 기계류가 대부분, 81 년 HK$ 4 억 7,367 만, 82 년 HK$ 1 억 6,628 만, 83 년 HK$ 1 억 9,540 만, 84 년 HK$ 9 억 1,069 만으로 84 年은 전년비 366.1 % 증가.

○ 雜製品 (SITC.8) ; 81 년 HK$ 6,716 만, 82 년 HK$ 4,467 만 , 83 년 HK$ 1 억 5,942 만, 84 년 HK$ 2 억 6,339 만으로 84 년은 전년비 65.2 % 증가.

○ 特殊品 (SITC.9) ; 輸出額은 그다지 많지 않으나 계속 증가추세임. 81 년 HK$ 31 만, 82 년 HK$ 56 만, 83 년 HK$ 130 만, 84 년 HK$ 488 만,

臺灣으로서는 對中共交易에 따른 이익추구로 인한 政治的 혼란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홍콩의 中共귀속문제는 이러한 점에서 가장 큰 問題가 될 것으로 염려되고 있다. 臺灣의 입장에서 對中共貿易은 수송거리상의 利點 이외에도 양국의 經濟的 보완성이 크다는 특성과 무역구조의 다각화라는 차원에서 매우 현실성있는 貿易이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무역으로 인하여 대만당국은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입장 사이에서 딜레머에 빠질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中·臺交易에는 양국간 통일협상의 진전여하를 비롯하여 수많

〈表-2〉　　臺灣의　홍콩經由　對中共　輸出品　構成比率

(SITC　分類基準,%)

SITC	名　　稱	1984	1983	1982	1981
0	食料品　및　산動物	0.15	0.37	0.49	0.08
1	飮料　및　연초	—	0.01	—	—
2	鑛物性　연료　이외의　非食用　基本材料	3.05	1.26	1.71	1.91
3	鑛物性燃料, 潤滑油	0.01	—	—	—
4	動·植物性樹脂	—	—	—	—
5	化　學　品	2.29	1.26	2.18	1.30
6	原 料 別 製 品	59.07	68.07	78.89	71.91
7	機械　및　運搬用機器	27.37	15.93	13.16	21.70
8	雜　製　品	7.92	13.00	3.53	3.08
9	別揭　이외의　特殊品	0.15	0.11	0.04	0.01
	合　　計	100.00	100.00	100.00	100.00

資料：홍콩貿易統計局　發表.

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中共은 우선 홍콩귀속문제가　진전되어　나감에　따라　집요하고도　다각적으로　거센 對臺灣平和攻勢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美中共關係의　진전여하에 따라　中共의　對西方　국제분업에의　참여속도가　높아지게　되면, 臺灣政府의　국제적　위치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양국간　교역전망은　향후　대만이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하느냐에 달

〈表-3〉　　○臺灣의 홍콩經由 對中共 輸出現況

(單位 : HK$,천)

SITC	名　　稱	1984	1983	1982	1981
0	食料品 및 산動物	5,017	4,545	6,251	1,819
1	飮料 및 煙草	—	98	14	—
2	鑛物性 연료이외 非食用 基本原料	101,486	15,445	21,569	41,723
3	鑛物性燃料, 潤滑油	182	3	—	—
4	動物性·食物性 樹脂	—	5	—	—
5	化　學　品	76,185	15,397	27,491	28,342
6	原 料 別 製 品	1,965,662	834,927	997,106	1,569,280
7	機械 및 運搬用機器類	910,685	195,403	166,282	473,665
8	雜　製　品	263,388	159,415	44,670	67,162
9	別揭 이외의 特殊品	4,874	1,299	559	314
	合　計	3,327,483	1,226,540	1,263,943	2,182,308

資料 : 홍콩貿易統制局 發表.

려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선택은 대만내부측면에서 볼 때, 1) 蔣經國 현총통의 후계문제, 2) 臺灣住民의 정치적 불만과 대만독립문제 3) 대만경제의 안전성문제 등의 요인에 의해 左右될 것이다. 또한, 中共內部의 정치정세변화와 현대화계획의 추진성과 등도 中·臺交易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양국간에 작용하는 이러한 경제외적인 변수를 무시하고 肯定的인 측면에서 양국간 經濟交流를 전망한다면, 中共은 같은 민족의 동질성

과 대만의 성공적인 경제개발경험의 축적을 바탕으로, 대만으로부터 資本, 經營, 技術面에서의 協力을 끌어 들이는 한편, 대만에 대하여 광대한 市場 및 풍부한 資源을 공급함으로써 전면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궁극적으로 臺灣經濟의 對中共依存度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통일협상이 매듭지어지기 전에는 臺灣當局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양국간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만정부가 현상태로 존속하는 한, 中·臺經濟交流는, 政治的 제요인이 저변에서 作用하는, 根本的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